

“도민과 함께 뛰는 열린 도정 조성”

전북자치도 “지역 현안 국정과제 세부실천항목에 포함토록 최선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디지털 AI 기반 혁신 생태계 포럼도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영평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국정과제가 100~120개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과제당 5개 정도의 세부 실천 과제가 설정될 예정”이라며 “결국 총 500~600개의 세부 실천 항목이 만들어질 텐데, 전북의 현안들이 이 안에 꼭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산업 육성, 디지털 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 방문에 이한주 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과 면담하며 전북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훈석 위원장께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지켜야 하며 돕겠다’고 하셨다”며 “전북의 국정과제 반영에 든든한 우군이 생긴 것 같은 큰 희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고 2차 지급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 5,145억원 중 국비 90%, 지방비 10% 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도는 지방비 반영을 위한 추경 시기를 당초 9월 회기를 앞당겨,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회와 상의 중이다.

전 실장은 “예산 미확보로 늦춰지는 일 없도록, 국비 선 투입과 추경 반영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콜센터 구축과 도시군 신속지원 전담반 운영을 통해 민

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도민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지난주 완주에서 열린 ‘디지털 AI 기반 혁신 생태계 포럼’은 단순한 기술 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었다”며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부 전에는 디지털 AI가 뭔지조차 몰랐지만, 알아갈수록 이 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실감했다”며 “이

같은 국가사업이 전북에 자리 잡게 된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전영평 실장은 마지막으로 “도민들께서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전북의 기회와 도전을 함께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북도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열린 도정 운영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국정과제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실국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행정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을 찾아 민선 8기 전북자치도정의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피지컬 AI, 전북의 새 미래 먹거리”

민주 정동영 의원,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세미나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 사진)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상운 의원(전주을)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사업-전북세미나’가 지난 11일, 완주군청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기관·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위한, ‘AI, 왜 전북인가?’라는 주제로, 피지컬 AI 트렌드와 현안 및 산업 분석을 통해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좌장은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정동영 의원, 토론발제는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류덕산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와 김운태 우석대학교 부총장이 참여했다. 기관에서는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과 정우석 캠퍼스융합기술원 부부장이 참석했고, 산업계에서는 김필수 네이버 상무, 이영탁 SKT 부사장,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이 자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전북의 피지컬 AI 사업은 새만금 이후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



은 디지털트윈(현실 공간을 컴퓨터 안에 복제한 가상모델), 로봇기술, 강화학습 기반의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실증 기반’ AI 기술을 검증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와 전북대학교가 협력해 전북에 AI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AI 인재를 양성하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구축할 것”이라며 전북을 AI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피지컬 AI 혁명 열차 선두권에 탑승하였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중역 과정 전반을 주도하며 전북 피지컬 AI 사업 관련 382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5 제2차 추경에 반영했다. /이만호 기자

농업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

민주 윤준병 의원 발의 ‘농업민생 4법’ 중 2건, 국회 농해수위 통과 농어민 실질적 피해 복구·생업 안정 초점... 향후 법사위 등서 심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업 안정에 초점을 맞

췌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민생 4법’ 중 일부다.

윤 의원은 올해 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발의했고, 새 정부 출범과 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윤 의원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은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최종 통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태환 기자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명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14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시작으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는 16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이어 17일 농산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8일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금융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장수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공직자 지원 방안 제안’, 김남수 의원의 ‘필수농자재 지원방안 마련 촉구’, 최한주 의장의 ‘인구소멸 지역 지역회화 사용자 확대 촉구’ 등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종섭 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정복 의원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회기 동안 군의회는 연초 수립된 군정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의 이행 상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9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반대”

권요안 도의원, 1인 시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며, 완주군 삼봉지구 일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권 의원은 “오늘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에서 주민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이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권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이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는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몰아붙이기식’ 통합을 강행하고 있어, 완주군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가 오는 20일 완주군 병동읍 삼봉지구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흡수에 불과하다’는 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며, 완주군 삼봉지구 일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판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거처를 완주군으로 한시적으로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진정한 소통 의지가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지사는 통합 문제로 촉발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며,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도지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오늘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개최

25일까지 11일간... 올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부터 제4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도정 주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기장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심사와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 정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들 바라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 현장행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4일 완주군 운주면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반적인 재해복구사업 진행 상황과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청취하고, 운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는 재방공사 진행 상황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추중로회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 시설 적정온도 유지와 상시 개방 여부, 취약계층 이용 환경 등을 확인했으며, 솔밭가든 인근 계곡에서는 구명장비 비치여부 등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개정안 제정

한명숙 남원시의원 발의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폐기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원순환 조례안은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순환경제 집행계획의 수립·시



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한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례로 담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